주간건설 Review

500호 2017.8.25(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두산중공업, '마이드림 청소년진로체험단' 발대식
- 현대산업개발, 수해의연금 1억원 기탁

▣ 건설경제 일반동향

- 노후 SOC에 대한 재정적 대응 필요
- 민간제안 투자사업 경직 심화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부실시공 건설사 '先분양' 제한 추진
- 조달청, '(가칭)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정보통신공사에의 공사금액 하한 제도 도입 법안, 의원입법 발의

◈ 두산중공업, '마이드림 청소년진로체험단' 발대식

○ 8월23일 두산중공업은 창원 도계중학교에서 '2017 마이드림(M.Y.Dream, Make Your Dream) 청소년 진로체험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음



두산중공업이 창원시 도계중학교에서 개최한 '2017 마이드림 청소년진로체험단' 발대식에 참석한 참가자들

○ '마이드림 청소년진로체험단'은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춘 두산중공업의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창원시 관내 도계중, 호계중, 봉곡중, 마산중, 진해남중학교 등 5개 학교 1학년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면밀하게 탐색하고, 이공계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임

○ 도계중을 시작으로 각 학교별 발대식 개최 이후 체험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9회에 걸쳐 진로 탐색, 체험, 설계 등 3단계로 짜여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한편, 마이드림 청소년진로체험단은 두산중공업이 추진 중인 성장단계별 인재육성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청년에너지 프로젝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창원교육지원청과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현대산업개발, 수해의연금 1억원 기탁

○ 8월18일 현대산업개발은 청주시청에서 이승훈 청주시장과 김대철 현대산업개발 경영관리부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를 입은 청주시민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의연금 1억원을 기탁하였음

○ 이날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운 청주시 수재민들을 위해 이같은 성금을 기탁했다고 설명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



수해의연금 전달식에 참석한 현대산업개발 이형재 상무, 김대철 사장, 이승훈 청주시장, 장경일 건축주택사업본부장(사진 왼쪽부터)

○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랑나눔 릴레이'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노후 SOC에 대한 재정적 대응 필요

○ 8월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SOC 분야 결산 규모는 2013년~2016년 사이 연평균 0.3% 줄어 12대 주요 지출 분야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

○ 아울러 동 보고서에서는 "노후 SOC에 대한 재정적 대응방안 분석"을 별도로 기술한 가운데, 국내 SOC 사업의 경우 신규 SOC 투자사업과 노후 SOC 대응을 위한 유지보수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음

<주요내용>

❒ 현황

- 빠른 경제발전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구축된 우리나라의 SOC는 2016년말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1)이 총 26,930개소이며, 이 중 1990년까지 준공된 시설물은 3,872개소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이후 SOC 투자가 본격화되어 23,058개소의 시설물이 구축됨

- 2016년 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2,774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0.3% 수준이나, 20년 후인 2036년에는 16,558개소(61.5%)에 이를 정도로 SOC 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기반시설물 노후화 추이>

(단위 : 개소, %)

구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노후화 기반시설 수	2,774	4,168	6,944	11,736	16,558
비중	10.3	15.5	25.8	43.6	61.5

주: 1. 2016. 12. 31.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기준
2. 2016년 이후 신규 시설물 건설은 없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 이처럼 2020년 이후 SOC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후 SOC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 SOC의 기능 저하, 수명 단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SOC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대응방안이 필요

❒ **SOC 노후화 대응 전략 및 중장기 유지보수 투자계획 수립 필요**

- SOC 노후화 대응 전략 및 중장기 유지보수 투자계획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에 SOC 노후화 대응 전략 및 중장기 유지보수 투자계획 반영)
- 중장기 유지보수 투자계획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SOC의 노후화를 감안한 비용 산정 방식 개발할 필요(현재 SOC 유지보수 비용은 시설 물량에 비례하여 단순 책정하는 방식으로 산정 중)

❒ **SOC 노후화 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개선 필요**

- 정부는 국내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SOC예산을 18.5조원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
- 그러나 정부의 SOC 분야의 예산 감축 계획 수립 시 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이처럼 신규 SOC 투자 비중과 유지보수 투자 비중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SOC 전체 예산이 감축될 경우 SOC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

<SOC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24.4	23.1	25	23.7	26.1	23.7	22.1	20.3	19.3	18.5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6), 기획재정부

- 그동안 우리나라의 SOC 투자가 신규건설 위주의 SOC 투자에 치중되어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만큼, 국내 SOC 사업의 경우 신규 SOC 투자사업과 노후 SOC 대응을 위한 유지보수사업의 효율적 재원 배분이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로 과거에 비하여 SOC 분야에 대한 투자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적정 유지보수 예산 확보 필요
- 총액계상사업인 유지보수 사업 중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유지보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민간제안 투자사업 경직 심화

○ 새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4월28일 롯데건설이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성남~과천 고속도로 사업을 마지막으로 철도나 도로 등 민간사업제안이 사실상 중단됨

○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안성~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 확정 전후를 기점으로 민자시장이 극도로 경직되면서 향후 경제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 **현황**

-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국가재정으로 추진하는 '공공 주도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표
- GS건설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무려 10년이 걸려 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을 제안한 '안성~세종' 구간은 적격성조사 통과 불과 두 달 여만에 국토부로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민간제안 사업 철회를 통보받음
- 이에 따라 민자업계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검토해오던 신규 사업 제안을 중단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이슈가 될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
- 2015년 4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건설업계는 20여건의 신규 민자사업을 제안했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은 GS건설이 제안한 '안성~세종 고속도로' 단 1건뿐이었고 이마저도 정부가 공공성 강화 원칙에 따라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민자업계의 사업 제안 성과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창~김포, 시흥~계양, 계양~김포, 김해신공항~해운대, 성남~과천 고속도로 등)

❒ **문제점 및 전망**

- 정부의 SOC 재정투자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정책기조 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의 재정전환에 따른 정책 신뢰도 저하와 함께 2015년 5월 이후 제안된 사업 중 단 한 건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민자업계의 신규사업 제안 의지 및 여력 상실
- 특히,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떤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민간투자시장의 급격한 경직으로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민자 담당 부서의 통폐합 또는 축소가 불가피
-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등 공기업들이 계획하지 않은 사업의 추진으로 부채증가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이미 계획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 계획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부실시공 건설사 '先분양' 제한 추진

○ 8월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탄2 신도시 신규분양 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하여, 아파트 하자문제를 거론하며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안함

○ 이원욱 의원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 제한 규정에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벌점제도'를 연계하여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 제한을 제의함

○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원욱 의원은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 조달청, '(가칭)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최근 조달청은 '대형-중소건설사 멘토제'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조만간 확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8월25일 건설업계 간담회를 실시,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목적

- 멘토, 프로테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자율의사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
-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 이행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규정

❒ 멘토기업과 프로테제 기업이란?

- '멘토기업'은 프로테제 기업에게 공사관리능력, 경영전략 등을 지원하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상 1등급 업체
- '프로테제기업'은 멘토 기업의 지원을 받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중소건설업체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상 2등급 이하 업체

❒ 상호 지원 분야

- △공사관리능력(공정, 품질관리) △경영전략 수립(경영컨설팅, 전문화) △기술개발

능력(전문기술 지원) △재무관리 능력(원가, 리스크 관리) △기타

❒ **협약 체결 및 협약에 대한 평가**

-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상호 협의 하에 지원분야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내용,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한 협약서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협약서 승인여부 결정
- 멘토기업은 최대 5개의 프로테제 기업과 협약 체결이 가능하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은 협약 체결 불가
- 조달청은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을 지원하고, 중간점검(연도별), 최종점검 등을 통해 협약이행에 관해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구분

❒ **협약체결에 따른 인센티브**

- 협약이행 평가결과, 보통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PQ 신인도 가점, 종심제 가점, 기술형입찰 수의계약시 우대, 조달청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정보통신공사에의 공사금액 하한 제도 도입 법안, 의원입법 발의

○ 8월1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이는 전체 약 8,800여개인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2.7%인 238개사에 불과함에도 이들 대기업이 전체 정보통신공사 매출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업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측 설명

○ 한편, 종합건설공사(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건설업자의 경우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시평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이라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에의 공사금액 하한 제도 도입**

- (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
- (예외)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1.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자신이 공사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공사
2. 공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공사(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공사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공사로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